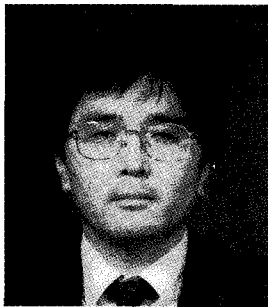


육우산업의 총체적 위기 극복에 나서자



윤 주 이

한국농어민신문 부장

정부자원에서는 비육우 농가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합사료 부가세 영세율적용을 전면실시 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정확하고 구체적인 수급대책을 마련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비육우농가들은 고품질 위생 쇠고기 생산에 중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최근 국내 육우산업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망된다. 지난해 고름우유사건이후 수입증가로 인해 분유재고가 쌓이면서 낙농가들의 젖소조기도태가 크게 늘고 있고 쇠고기 소비마저 부진. 소값이 큰 폭으로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사실 최근 산지 젖소값을 예년보다 2/3수준 떨어진 마리당 평균 1백~2백만원선에 거래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1백만원 이하의 거래도 허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지 한우가격(큰수소 5백kg 기준)도 작년말 3백23만원대에서 지난 5월 16일에는 무려 17%가량 떨어진 2백69만5천원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젖소 비육우 및 한우가격 하락도 비육우 사육 농가들의 경영수지에 큰 타격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 이에 대한 근본대책이 조기에 마련되지 않는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쇠고기 및 유제품 소비가 뚜렷하게 늘 것으로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수입쇠고기 및 유제품의 수입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국제 사료곡물가격마저 폭등, 사료값상승을 부추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러한 총체적위기에 처한 비육우산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낙농 및 한우산업에 대한 대책과 사료산업 기반확충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대책들을 추진하기에 앞서 왜 국내 비육우산업이 이 지경까지 왔는지를 냉철히 반성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다. 사실 국내 비육우산업은 지난 90년이후 한 두차례 불황을 경험했지만 그런대로 호황을 구

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이런 장기간 호황이 우리 낙농육우인들의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지 않았나 반문하고 싶다.

최근 분유파동은 지난해 11월 고름우유사건 이후 소비부진도 원인이지만 무엇보다 무분별한 유업체들의 유제품수입에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총 유제품 수입량이 지난 90년만 해도 2만7천톤이었던 것이 지난해 무려 306%가 증가한 9만8천7백톤을 수입한 것을 보더라도 입증된다. 이러한 현황은 국내 분유시장을 잠식, 낙농가들에겐 제대로 유대를 지급받지 못하게 했으며 젖소비육 사육농가들에겐 산유량이 적은 저능력우나 노페우의 조기 출하를 야기하게 한 것이다. 그러나 낙농관계 전문가들은 지난 88년부터 개정을 추진하려 했던 낙농진흥법이 조기 결실을 보았다면 오늘과 같은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법에는 원유수급 및 안정과 유제품을 무분별하게 수입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있어 결국 젖소 비육우농가들에게도 적잖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비육우농가는 무엇보다 최근 산지 소값 하락을 단순하게 봐서는 안될 것이다. 그동안 국내 산지소값이 외국에 비해 2~3배 정도 높아 국제경쟁력에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인위적인 가격하락을 위해 수입쇠고기를 무리하게 방출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농림수산부는 쇠고기가 완전 개방됨을 오는 2004년까지 한우가격의 경쟁 가능한 적정수준을 마련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한우숫컷 5백kg기준 3백만원대로 적정가격을 세웠던 것이 2백60만원대까지 하락 농림수산부도 비상이 걸렸다. 그동안 기본 쿼터보다 수입쇠고기를 더 들여와 무분별하게 방출했음에도 하락을 보이지 않던 산지 소값이 최근 하루가 다르게 큰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그동안 높은 소값에 대한 기대심리로 올해 전국의 한우 사육마리수가 90년 들어 가장 많은 2백70만 마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 가격하락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결국 지난해 무분별하게 비싼 송아지를 구입, 입식한 농가는 큰 손실을 보게 됐다.

어떻든 국내 육우산업은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다한 분유재고와 소값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은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대안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물론 비육우 농가들은 정책의 오류로 인해 발생한 상황으로 치부, 정부에 대책을 촉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제 정부를 믿는다는 것도 한계가 있다. 유제품 및 쇠고기의 수입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국제적인 상황에 처해 있어 보조금 지급을 할 수 없는 등 규제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큼 정부차원에서는 비육우 농가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합사료 부가세 영세율적용을 전면 실시 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정확하고 구체적인 수급대책을 마련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비육우농가들은 고품질 위생 쇠고기 생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오는 7월 1일부터 냉장쇠고기의 유통기한이 완전 자유화 되고 한우고기의 잔류물질 검사도 강화된다. 냉장쇠고기의 유통기한이 자유화되면 가장 타격이 큰 농가는 젖소비육 농가들 일 것이다. 육류등급제 실시 이후 육질면에서 우수한 한우를 생산 공급하고 있는 농가들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젖소 비육우 농가들은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냉장 수입쇠고기까지 들어올 경우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쉽게 포기해서는 안된다. 그동안 젖소고기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으로 제값을 받지 못했지만 이제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젖소고기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젖소고기전문 판매점이 없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며 그나마 축협중앙회 시범판매장에서 젖소고기 코너가 있던 것까지 없어진 것은 젖소 비육우인들의 자성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제 소비자를 생각하지 않은 쇠고기를 생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쇠고기 쌍무협상을 통해 한국내 축산물 검사결과를 제시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미국의 육류수출협회 한국지부가 자체적으로 우리 축산물의 유해잔류물질 조사 자료를 가지고 언제 터트릴 것인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 이들에게 우리의 쇠고기시장을 잠식당할 수 없다는 각오와 강한 신념을 가지고 고품질 안정 축산물 생산에 우리 비육우 농가들이 앞장서야 한다.